

“2012년 여성·가족정책 수요 조사 결과”

I. 개요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함¹⁾

- 이번 조사는 최근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올해 5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실시함.
- 전국 2,000가구에 거주하는 20~65세 미만 성인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금년 5~6월 중순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성별과 연령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뤄짐.

- 조사 내용은 남녀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 부문별 정책수요 등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여성 현안과 정책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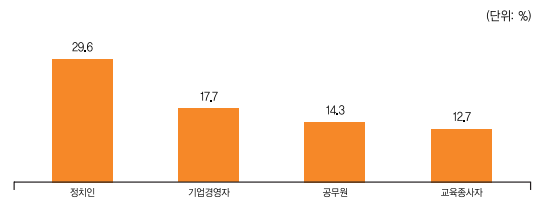
☞ 주요 결과

- 국민의 75.5%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 되고 있다고 인식함.
- 아들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에 29.2%만 긍정적 태도를 보임
-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 정치인 육성 및 발굴(33.1%),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 증기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26.4%) 필요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임원 할당제(26.4%), 여성관리자 역량증진 지원(25.0%), 임원추천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17.8%), 여성인사풀 정비(17.5%) 등 필요
- 여성일자리 분야에서는 남녀 고용차별 해소(38.8%), 일·가정양립 제도 확산(27.1%)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해, 여성은 남성의 인식 확대(28.4%), 남성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이 필요한 것으로 봄.
- 가족 정책 분야에서 자녀양육 지원(33.8%), 일·가정 양립 지원(25.2%)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 유형으로는 자녀양육기 한부모가족(25.1%), 맞벌이가족(22.1%), 노인부부가족(14.5%)등임.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것은 성폭력

1)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태홍·양인숙·김영택·황정임·배호중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38.6%), 가해·재범자 처벌·단속(20.7%), 피해자 보호·지원(15.3%)등 필요.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35.5%),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 방안(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28.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18.7%)등 필요



〈그림2〉 남녀평등을 위해서 의식변화가 필요한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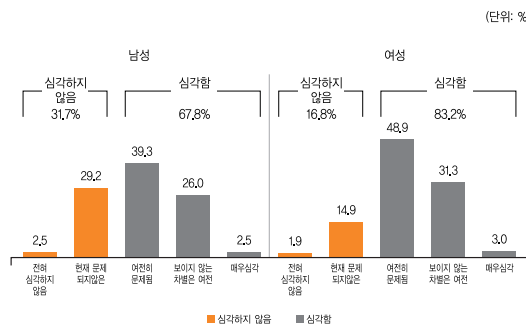
Ⅱ. 2012년 여성정책 주요 조사 분야별 분석 결과

이슈 #1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국민의 75.5%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고 인식함

-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 83.2%, 남성 67.8%로,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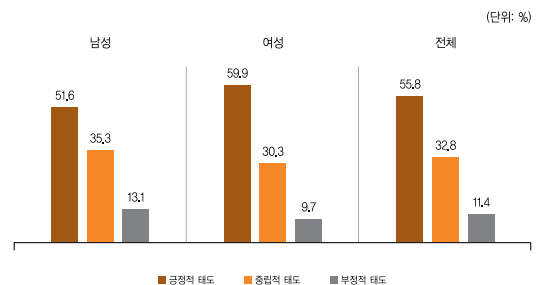


〈그림1〉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 (중복응답)은 경제 및 소득 부문으로 72.3%, 그 다음은 정치 71.8%, 안전(범죄) 70.0%, 고용·노동 부문 69.6%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교육, 보건 영역 순임
- 남녀평등을 위해서 가장 의식변화가 필요한 집단은 정치인 29.6%, 기업 경영자 17.7%,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4.3%, 교육계 종사자 12.7%순으로 나타남. 남녀간 응답률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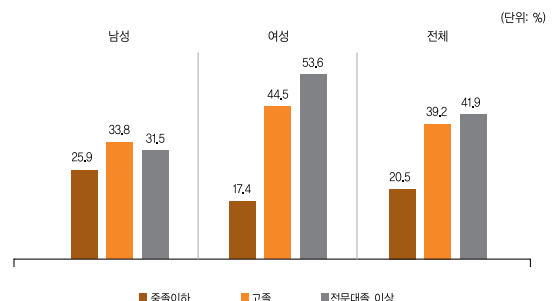
- ☞ 취업난이 심각하면 남성을 우선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여성임

- 간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 다수 직종에 남성 취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또한 기계공학기술자 등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림3〉 남성의 여성 집중 직종 취업에 대한 성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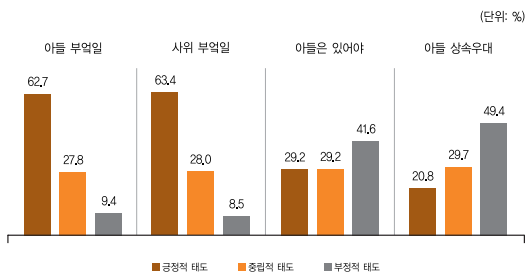
- 취업난이 심각하면 남성을 우선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 34.7%와 부정적 태도 38.4%, 중립 26.8%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임. 그러나 여성·저연령·고학력 집단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남성·고연령·저학력 집단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20대 여성의 부정적 응답률은 60.4%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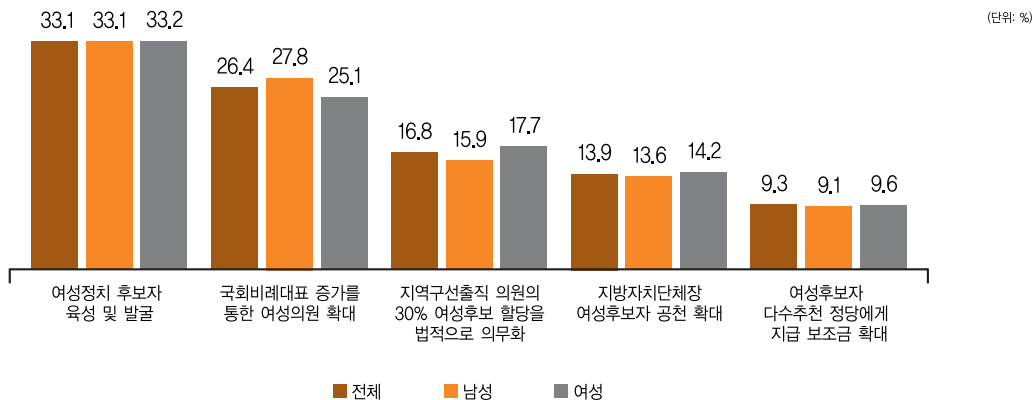
〈그림4〉 남성 우선 취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비율

☞ 자녀 중 아들이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29.2%뿐임

- 우리 국민들은 가사 혹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남성 결혼한 아들 혹은 사위가 부양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조사응답자의 29.2%만이 자녀 중에서 아들이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서, 50대 이상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더 많아 60대 남성은 긍정적 응답률이 51.7%, 60대 여성은 48.8%로 전체 응답 분포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의 20.8%만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즉 재산 상속에서 아들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그러나 실제 재산상속을 하는 연령층인 50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의 다수는 여전히 재산상속에서 아들을 우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그림5〉 남녀문제와 관련된 의식 및 문화에 대한 태도



〈그림6〉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정책 우선순위

이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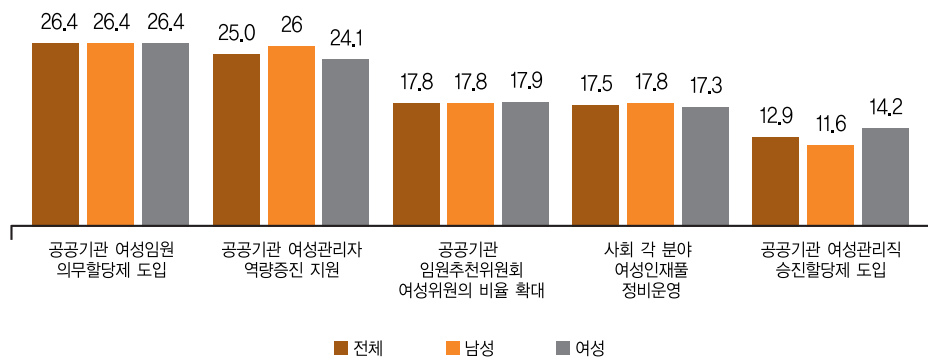
대표성 분야

☞ 여성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정치후보자 육성 및 발굴'이 필요

-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난 것은 33.1%를 차지한 여성 정치인 육성 및 발굴임. 그 다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26.4%),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을 법적으로 의무화(16.8%),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 공천 확대(13.9%)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에서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정치 후보자 육성 및 발굴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여성 정치후보자 육성 및 발굴을 위해서 대학 정당 및 단체 등에 여성 후보자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여성 정치 인력뱅크 구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함.

☞ 공공기관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26.4%)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역량증진 지원(25.0%),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17.8%),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그림7〉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정책 우선순위

풀의 정비 및 관리(17.5%),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승진 할당제 도입(12.9%) 순임

차별 형태가 많음에 따라 향후 노동 시장의 간접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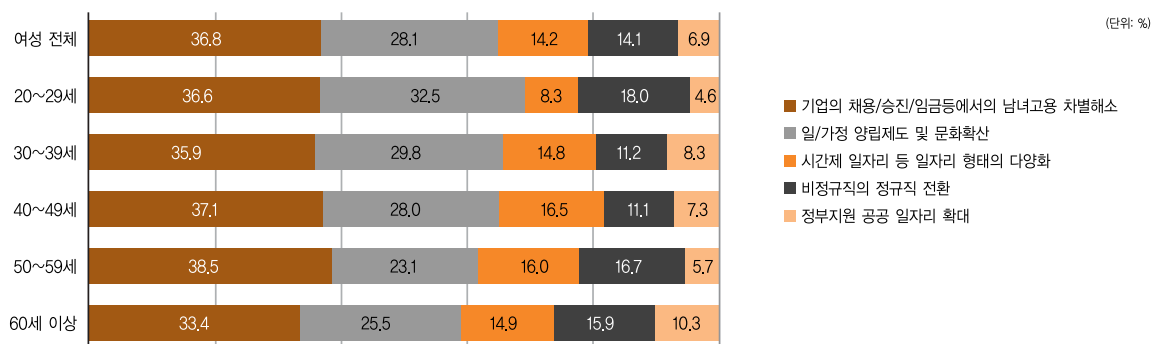
일자리 분야

☞ '고용차별 해소'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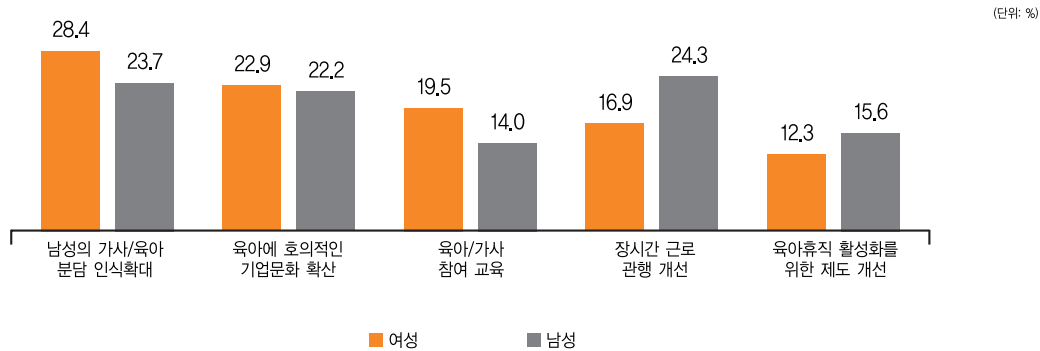
-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수요에서는 남녀 모두가 채용·승진·임금 등에서의 고용차별 해소를 38.8%로 1순위로 꼽았는데, 남성(40.9%)이 여성(36.8%)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 확산(27.1%),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형태 다양화(15.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2.4%) 순이었음
- 채용 및 승진 차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간접

☞ 남성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 인식 확대(26.1%),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22.5%), 육아 및 가사 참여 교육 확대(20.6%)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음. 성별로 정책수요가 서로 달라서 여성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인식 확대(28.4%), 남성 특히 20~30대 남성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가사·육아 관련 남성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8〉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우선 순위



〈그림9〉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 정책 수요

이슈 #1

보건분야

☞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 산전 검사 시간 '유급휴가 보장'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산모 대상 건강지원과 관련된 정책수요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 산전 검사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산전관리 교육 무료 지원(36.4%),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진료 의무화(12.9%), 임신 출산 관련한 전문 상담자 양성(8.6%) 순으로 나타남.
 - 20대, 중졸 이하에서는 정기 산전검사 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 보장 정책수요가 특히 높았음.
- 정기 산전검사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위해서 적용대상 사업체 범위 확대와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한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산전 관리 교육, 산전 산후 우울증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중년여성(40~50대) 대상의 건강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에서는 여성암 등 여성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57.1%)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일과 가사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지원(27.2%),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검진하는 제도 도입(10.9%),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 강화(3.4%) 순이었음.
 - 40대 여성 고학력 여성이 여성암 등 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약간 더 높았음.
- 여성노인(65세 이상) 대상의 건강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에서는 찾아가는 건강진단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확충(42.1%)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여성암 등 여성 질환 돌봄 및 치료 지원(41.0%),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검진하는 제도 도입(8.1%), 자살할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7.0%) 순임.
 - 그러나 직접적인 정책대상자인 50대(43.7%), 60대(50.1%) 연령층의 조사 응답자는 여성암 등 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았음.
- 보건분야의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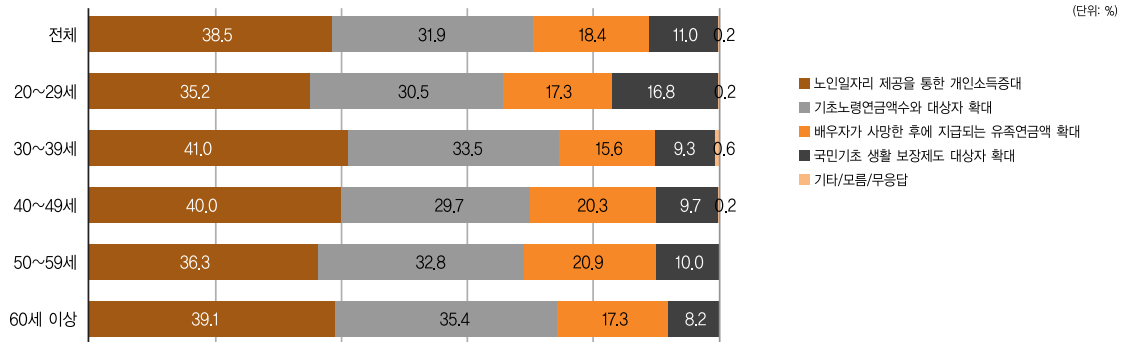
〈표1〉 중년여성(40대) 대상 건강지원 정책 우선순위

(단위: %)

	여성암 등 여성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	일·가사를 함께 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검진하는 제도 도입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 강화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관리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57.1	27.2	10.9	3.4	1.3	0.1	100.0
남 성	55.7	28.9	11.0	2.9	1.5	0.0	100.0
여 성	58.6	25.6	10.8	3.8	1.0	0.2	100.0

이슈 #5

복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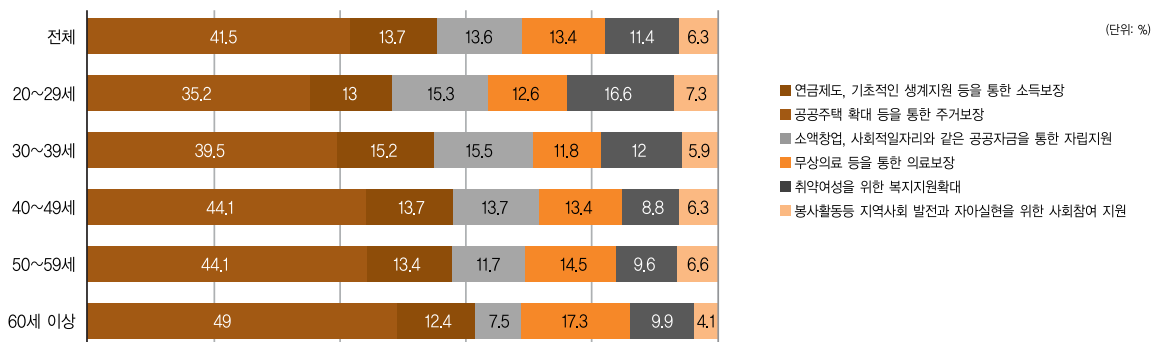
〈그림10〉 여성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 여성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 제공과 기초노령연금 액수와 대상자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한 정책 수요는 노인 일자리 제공 38.5%, 기초노령연금 액수와 대상자 확대 31.9%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 높았고, 50대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액수와 대상자 확대, 30~40대는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현재 여성노인세대의 경우 일자리 발굴과 기초노령연금 확대(대상자 확대, 연금액 상향조정), 베이비부머 이후 여성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일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함 〈그림 10〉.

☞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압도적으로 연금제도, 기초적인 생계지원 등을 통한 소득보장(41.5%)임

- 여성의 경우 40대는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50대는 의료보장과 사회참여, 60세 이상은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음.
 - 미혼은 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보다는 일자리 제공(16.5%), 취약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16.6%)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그림1〉.
- 따라서 복지영역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여성의 수급권 확보, 여성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보장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소득·의료·주거 등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성인사회 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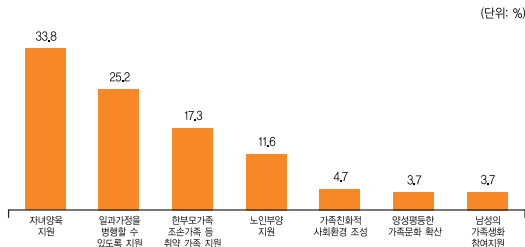
〈그림11〉 여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

이슈 #6

가족분야

☞ 자녀양육 지원,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가족정책 중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자녀양육 지원(33.8%)이었고 그 다음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25.2%),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17.3%) 순임. 20~30대는 자녀양육이나 일·가정양립, 50대 이상에서는 취약가족지원과 노인 부양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은 상대적으로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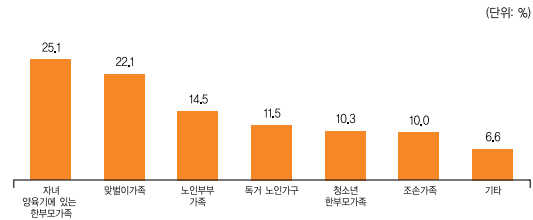


〈그림12〉 가족 정책 우선 순위

- 자녀양육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취약가족지원 정책은 보다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가족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유형은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가족'(25.1%), '맞벌이가족'(22.1%), '노인부부가족'(14.5%) 순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는 한부모가족유형(자녀 양육기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모두 합하면 45.4%에 이르러 맞벌이가족, 노인부부가족, 독거노인가구 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저출산 고령화, 100세시대 등 급속한 사회 및 가족변화에 따라 맞벌이가족, 노인부부가족, 독거노인가구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타겟팅) 가족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 모+자 혹은 부+자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그림13〉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 유형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세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기초보장 강화, 한부모가족의 특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슈 #7

안전분야

☞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 (38.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 (38.6%)가 가장 높음. 그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15.3%),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강화(14.3%),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5.8%),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5.1%) 등임 〈표2〉.
- 성폭력 발생시간에 대한 초기대응력 제고를 위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112로 연결 신속한 경찰의 사법적 대응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응급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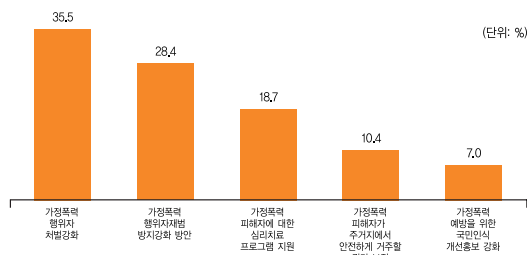
-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35.5%)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 방안(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28.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18.7%),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보장(10.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홍보 강화(7.0%) 순임.

〈표2〉 성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강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이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모름/무응답	계
전 체	38.6	20.7	15.3	14.3	5.8	5.1	0.1	100.0
남 성	40.3	19.7	15.6	14.2	6	4.2	0.1	100.0
여 성	37	21.8	15.1	14.4	5.7	6.0	0.0	100.0

(단위: %)

60세 이상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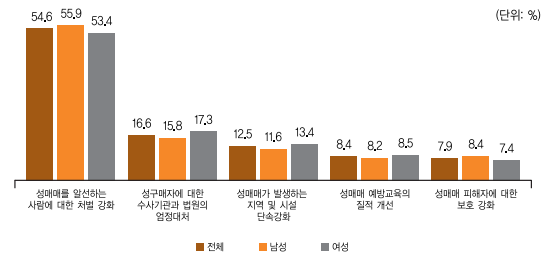
〈그림14〉 가정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

-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대처(16.6%), 성매매가 발생하는 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2.5%), 성매매 예방교육의 질적 개선(8.4%),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7.9%)로 나타남.



〈그림15〉 성매매 방지 정책 우선 과제

- 따라서 성매매 알선자의 몰수 및 추징을 부당이익의 성격에서 징벌적 제재의 성격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